

출입기자 산행

임기 중 잦은 선거는 국정 운영의 걸림돌

대통령 3년 간의 소회를 말하자면 대통령 임기 5년이라는 게 좀 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든, 정부든, 국회든 5년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중간 중간에 선거가 자주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안으로 말하곤 하는 중간 평가는 2년 가지고 중간 평가를 한다는 것이 결국 이미지 평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른 보기에 형식 논리로는 2년, 3년의 중간평가가 필요해서 선거를 중간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2년 가지고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이 이미지 평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간에 하는 선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 평가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너무 자주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3년 지나고 내가 소회를 얘기하자면, 바로 이것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5년이 좀 깁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좀 길게 느껴지고 제도적으로도 조금

긴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이 제도라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임기 중간에 선거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하던 일도 중단해야 되고 하려고 하던 일도 바뀌어 되는 등의 이런 선거변수가 끊임없이 국정운영에 끼어들기 때문에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3년 간의 소회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의 변수들이 따로 종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또 많은 대안을 얘기한다고 해도 실현될 가능성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은 추측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실제로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습시다. 단지 그냥 말하고 싶은 것은, 임기 중간에 자꾸 선거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 국정이라는 것이 중간에 선거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선거변수가 많다면 임기가 긴 게 아니고 짧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닌가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0년이든, 100년이든 중간 중간에 계속 자기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를 계속하게 되면 임기가 긴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선거이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선거이면 차라리 정치적 명제를 내걸고 정면승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입장에서는 정면승부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정책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 심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정책으로 심판 받지 못하고 계속 이미지 싸움만 하면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선거와 관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일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에 지장이 되니까 뒤로 미루자는 의견과 밀리지 않고 계속 하려는 의견이 맞서면 본질과 관계없는 엉뚱한 시비가 돼 버리기 일쑤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본질을 벗어난 표 싸움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책으로 심판받는 요소도 부분적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평가와 심판은 한꺼번에 모아서 딱 진퇴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문화

개헌은 이미 대통령의 소관을 떠난 것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역량 범위를 이미 떠난 것입니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라면 대통령은 특정 개헌의 이슈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있으면 그것이나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 초반에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국민들께 말하기는 했지만, 이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대통령이 개헌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추진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평지풍파 일으킬 일이 아니라 진행하는 일이나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에는 개헌을 고려한 얘기는 일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대통령 3년 동안 하나 깨우침이 있었다면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문화라는 것입니다. 제도가 좀 나빠도 잘 운영하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좋아도 운영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좀 지나친 것입니다. 내가 그 동안에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헌법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도 가장 결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거기에 올인한다고 쓰지는 맙시다. 거기 매달릴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하자고 하면 박수를 치든지 몇 개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개혁문제를 먼저 들고 나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지속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 그리고 국민 통합

앞으로 내 임기 중의 우선순위는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 그리고 국민 통합 같은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내 임기 중에 아주 호전되거나 아주 해소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악화되지 않게 한번 저지해 볼 생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10년 2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양극화 해소의 과제를 꺼낸 것입니다. 양극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청사진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점추진정책이 한미 FTA입니다. 찬반논쟁이 아주 많은 주제이지만 이 시대 하나의 큰 전환으로서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문제는 나의 남은 임기 동안에 제일 큰 이슈 아닐까 싶습니다. 양극화 문제와 한미 FTA 두 가지 다 아주 버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한국의 정책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